

# 유네스코 인포페이퍼

2026.2.13. 제1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2%의 공백과 2.367%의 청구서

유엔-유네스코 재정 위기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

### 핵심 요약

- 유엔 사무총장이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올해 7월 "재정적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네스코는 받지 못할 미국의 22% 분담금을 예산안에 허수로 포함해야 하는 낡은 규정으로 인해 더 복잡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 유엔-유네스코 분담금 조정계수(Coefficient)는 유엔-유네스코 간 회원국 차이로 인해 유네스코 회원국이 추가로 지불할 분담금을 나타내며, 2026년 약 1.0078에서 2027년엔 약 1.29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정이 모자란 유네스코가 한국의 자발적 기여 추가 확대 압력을 가중할 경우, 한국은 단순 재원 지원을 넘어 국내 민간 기업(문화산업, 에듀테크)의 기술과 유네스코 소프트파워를 연계하는 스마트 공여로 전환이 필요하다.

### 01. 배경: 유엔 재정 경고와 유네스코의 불편한 예산안

#### 유엔까지 전염된 재정 붕괴 공포

지난주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오는 7월 유엔이 "재정적 붕괴"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엔 시스템의 건전성은 현장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 이행에 달려 있는데, 유엔 2025년 미납 분담금은 사상 최대 규모인 23%, 약 15억 7천만불(2조 2천 8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1]

#### 탈퇴 유예가 만든 예산 딜레마

유네스코 재정 위기는 더욱 기형적이다. 미국은 '25년 7월 유네스코 재탈퇴를 선언하고 외교 업무를 철수했으나, 현장 제2조 6항에 따라 회원국 지위는 '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미국은 '26년에도 22% 분담금을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규정상 이 허수를 포함해 '26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sup>[2]</sup> 탈퇴하는 회원국의 분담금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해진 예산을 보호하려던 조항이 오히려 예산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셈이다.

## 02. 분석: 분담금 조정계수가 의미하는 것

### 산정 메커니즘과 과리율

'26년 한국이 납부할 유네스코 정규분담금 \$8,112,240(분담률 2.367%, 9위)에는 유네스코만의 독특한 셈법이 숨어 있다. 유네스코 분담률은 총 국민소득 GNI에 근거한 유엔 분담률에 조정계수(Coefficient)를 곱하여 산출된다.<sup>[3]</sup> 이 계수가 1보다 클 경우 그만큼 유엔과 유네스코 간 회원국의 과리율을 보여준다. '26년의 경우 분담률이 22%(최대율), 0.001%(최소율), 0.010%(LDC) 등으로 고정되는 39개국을 제외한 155개 회원국이 짊어져야 할 추가 비율이다.

### 조정계수가 말해주는 진실

2000년 이후 조정계수는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 변화가 초래하는 재정 리스크 지수이다. 최근 5년간 계수는 약 '22-23년(1.2917), '24년(1.0072), '25-26년(1.0078)이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가 완료될 '27년에는 계수가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2기('19.1~'23.6)의 1.2917 수준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의 정규분담률도 '26년 2.367%에서 '27년 3.325% 정도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회원국들은 지난 제43차 총회에서 '26-27년 예산 610백만불을 56:44의 비율로 '27년에 덜 내도록 설계해 놓았기 때문에 분담금 부담은 일부 완충된다.<sup>[4]</sup>

## 03. 동향: 제로 성장과 유예된 결정

### 제한된 파이를 둘러싼 갈등

미국발(發) 탈퇴 외교가 회원국 전체의 변동성으로 전가되고 있다. 미국 탈퇴가 확실한 상황에서, 제222차 집행이사회('25.10)는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명목 제로 성장(ZNG)<sup>\*</sup> 예산안을 채택했다.<sup>[5]</sup> 제43차 총회는 제한된 예산을 5개 분야(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로 배분하는 과정에 이견이 있어, 세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채 '26년 4월 제224차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했다.<sup>[6]</sup> 이는 '26년 첫 집행이사회가 각국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사수하기 위한 예산 전쟁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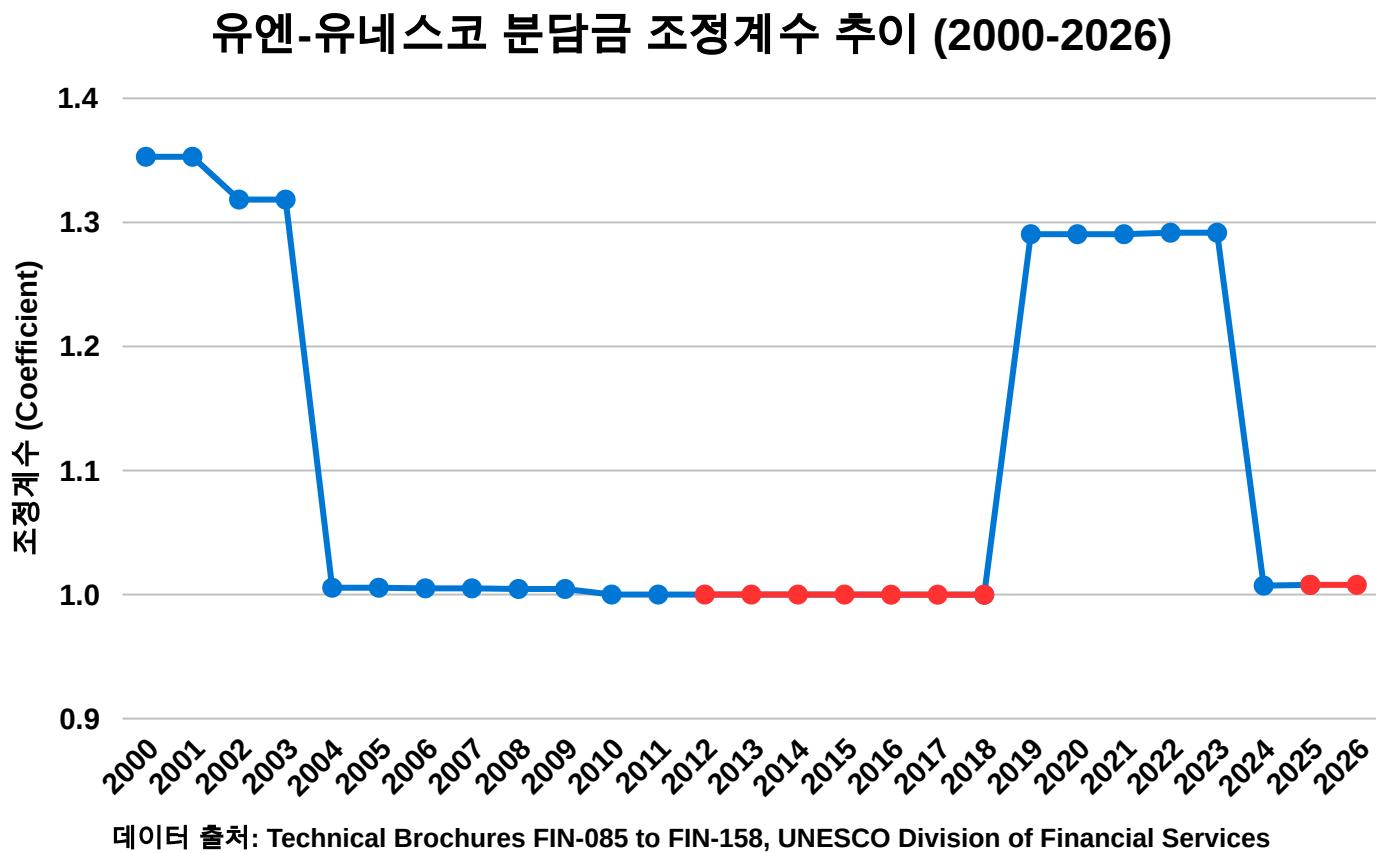
\*명목 제로 성장: Zero Nominal Growth(ZNG), 예산 액수를 이전 회기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물가 상승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는 예산 삭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자발적 기여로 사활적 전환

'26-'27년 예산안(43 C/5)<sup>[7]</sup>은 정규분담금의 한계를 자발적 기여로 돌파하려는 절박한 의지를 투영하고 있다. 1,814백만불 규모의 전체 예산 중 분담금은 610백만불에 불과하며, 무려 1,204백만불을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별도로 조달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분야별 예산 투입의 극심한 비대칭성이다. '24-'25년 분담금은 교육(42%), 문화(18%), 자연과학(14%) 순으로 배분되었으나, 자발적 기여는 문화(60%)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교육(17%),

정보커뮤니케이션(14%)이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있다. 유네스코의 핵심 사업 동력이 회원국들의 의무적 합의(정규예산)가 아닌, 공여국들의 선호도(자발적 기여)에 의해 기형적으로 좌우되는 '아젠다의 시장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 04. 데이터: 유네스코 재정 리스크와 한국의 자발적 기여 추이



### 유엔-유네스코 분담금 조정계수

위 그래프는 지난 26년간의 유네스코 분담금 조정계수 변화이다. 이 계수가 1보다 클 경우 그만큼 유엔과 유네스코 간 회원국 구성의 괴리율을 보여준다. 괴리율은 아래 표 해석과 같이 대부분 미국과의 동행 혹은 이별의 역사를 대변하며, 동시에 최대 공여국인 미국이 초래하는 유네스코 재정 리스크의 대리지표가 된다. 유네스코 재정 위기의 최고조는 조정계수가 높아 여타 회원국이 분담금을 조금씩 더 분담했던 시기가 아닌, 탈퇴하지 않은 미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은 기간(적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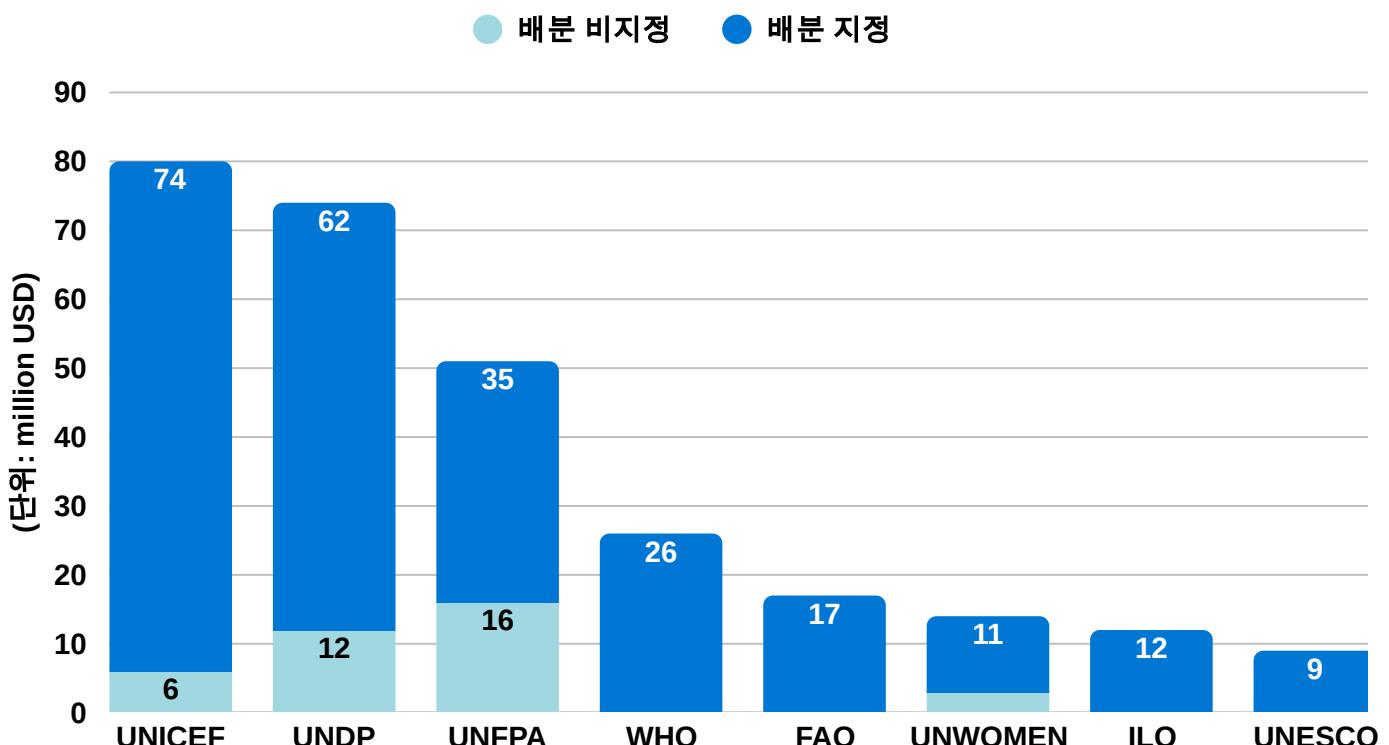
시기	변동요인 분석
2000-2003	미국 1차 탈퇴(1984)로 유엔-유네스코 괴리에 따라 회원국의 분담률이 최고조에 접근
2004-2011	미국 복귀 후 유엔-유네스코 분담률이 거의 일치하여 안정된 예산 수립으로 전환
2012-2018	팔레스타인 가입으로 미국이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예산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실시
2019-2023	트럼프 1기 미국의 2차 탈퇴(2017)로 계수 급등하고 중국이 분담금 1위로 등극
2024-2026	미국 복귀 후 트럼프 2기 미국의 3차 탈퇴(2026) 예정에 따라 계수 상승이 없는 재정 위기

\*'26.2월 현재 미국 미납금은 '26년 분담금 \$75,398,936(분담률 22%)을 포함한 총 \$765,198,224(약 1조 1200억원)

## 한국의 유엔기구 자발적 기여 현황

아래 그래프는 지난 4년간 한국이 유엔기구에 보낸 연평균 자발적 기여 규모이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한국의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여력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하여, 2026-27년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한 파트너십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주요 유엔기구별 연평균 자발적 기여 현황 (2021-2024)



그래프 인용: Overview of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UNESCO Division for Partnership (2025)

## 05. 전망: 한국의 전략 제안

### 정규분담금 조기 납부 지속

한국은 '24년 2월에 분담금을 조기(6.30 이전) 완납한 덕분에 당시 122일간 발생한 이자 \$128,102(약 1.7억 원)을 '26년 고지서에서 공제받았다.<sup>[8]</sup> '26년에도 최대한 조기에 납부 완료하여 2년 후 '28년 분담금 할인 혜택을 미리 확정 짓고, 4월 집행이사회에서 재정 위기 속 한국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발적 기여에서 스마트 공여로 전환

현재 정부부처를 포함한 총 11개 기관이 27개 자발적 기여 사업을 유네스코에 신탁하고 있다. '24-'25년 회기 \$6,650,000 규모로 회원국 기준 9위이다. 재정이 모자란 유네스코가 한국의 자발적 기여 확대 압력을 가중할 경우, 한국은 단순 재원 공여를 넘어 국내 민간 기업(문화산업, 에듀테크)의 기술과 유네스코 소프트파워를 연계하는 스마트 공여로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외공관 문화산업 거점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유네스코 문화 사업에 참여하거나(K-컬처 파트너십), 디지털 교육 전환을 추진하는 유네스코 교육 분야에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K-Edu 표준확산) 등 민간 혁신 역량을 유네스코 사업에 결합하여 소프트파워 증강의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 06. 참고문헌

[1] 조선일보, '트럼프식 해법이냐, 재정 불괴냐' 갈림길 선 유엔 ... "7월 현금 고갈"

[2]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2 - Membership, No.6

[3]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4]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43rd session, Samarkand, 30 October-13 November 2025, volume 1: Resolutions, Res 84. No.4.

[5] Decisions adopted by the Executive Board at its 222nd session, Dec 21. No.10.

[6]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43rd session, Samarkand, 30 October-13 November 2025, volume 1: Resolutions, Res 84. No.6.

[7]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6-2029 (43.C/5).

[8] Member States' contributions, Annex 1

유네스코 인포페이퍼는 국내 정책 현안과 관련된 유네스코 의제를 알기 쉽게 분석·정리한 정보 소식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연락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 / ap.center@unesco.or.kr

